

東北亞情勢與統一環境：1992年上半期

1992. 7. 8

國際研究室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I. 序 論	3
II. 美·日·中·러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4
1. 美國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4
2. 日本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8
3. 中國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12
4. 러시아聯邦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16
III. 東北亞 4強間 兩者關係	21
1. 美·日關係	21
2. 美·中關係	23
3. 美·러關係	24
4. 日·中關係	26
5. 日·러關係	28
6. 中·러關係	30
IV. 東北亞情勢	32
1. 東北亞安保環境	32
2.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36
〈附錄 1〉 1992年 上半期 主要事件 日誌	39
〈附錄 2〉 1992年 下半期 主要事件 豫想日誌	52

빈 면

I. 序 論

1992년 상반기 국제정세를 개괄하면 미·러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간의 대폭적인 핵감축, 러시아연방의 서방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미·러 동반자관계 구축 등으로 안보·경제 양면에서 冷戰構造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미·일간 세계적 차원에서의 동반자관계가 구축되고 중국의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의 역학관계는 미·일·중·러의 4강구조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내 양자관계는 화해와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상호의존과 協力關係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력균형의 변화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일부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지역긴장과 군비증강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역내국가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합의서 이행을 위한 南北協商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고는 북한의 핵문제 및 남북관계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북아 주변정세 변화를 정리·분석함으로써 統一環境 變化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美·日·中·러의 東北亞政策과 韓半島

1. 美國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가. 東北亞政策

「냉전이후시대」(post-Cold War era) 미국의 대외정책기조는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유일 강대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된 국제질서를 위하여 국제사회 및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분담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封鎖政策」(containment policy)에서 「集團介入政策」(collective 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할 것을 밝힌 바 있다(1992. 2. 5, 미 상원의외교위청문회). 이는 과다한 방위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과 대통령 선거전에서의 쟁점 부각, 그리고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미국내에 평화분담금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니 미국방장관은 매 2년마다 작성되는 「1994~99 회계년도 국방계획 지침」을 발표하였다(1992. 5. 4). 1992년 2월 중순 작성된 이 지침의 초안은 “러시아의 재부상과 독일, 일본 등 지역강대국의 출현을 방지하면서 超強大國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계속 확보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인해 미 의회 및 우방국가들로부터 군사패권 추구라는 비판을 받아

수정되었다. 수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국의 전략 목표로서 미국에 대한 공격 억제, 우방국과의 共同防衛體制 확대·강화, 미국 이해지역에 대한 적대국가의 지배 방지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안보 위협문제에 있어서 동맹국과의 책임분담 원칙하에 선별적 대처능력 유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셋째,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공동방위체제를 적극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아·태지역안보와 관련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하에 한·일 양국의 점진적 책임분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를 순방중인 월포비츠 미국방차관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과 중국의 군사비 증강을 아시아의 불안요인으로 지적하면서,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이 지역에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1992.6.29) 지역안정을 위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 지속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미국은 동맹국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확보하는 노력에 바탕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주요 지역에서의 「지역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나갈 전망이다.

나. 對南北韓關係

(1) 對韓國關係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1992.1.6)을 통하여 군사·안보면

에서 對韓防衛公約 준수 재확인,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확인, 북한의 核開發問題에 대한 공동대처 및 미·북한관계 개선조건을 재확인하였다. 경제·통상분야에서는 相互主義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관행과 市場開放原則,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협조,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 참여를 천명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전개된 정책협의를 통하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관심사인 북한의 核開發 문제가 한반도 및 역내 긴장완화에 역행되는 처사로서 동 문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核開發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주한미군의 제2단계 감축계획」(1993~95)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고(1991. 11),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의 核開發 拋棄를 위한 誘引方案으로서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Team Spirit)을 취소하는 등 對北 유화정책과 강경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1992. 5. 25)결과, 핵재처리시설의 존재가 확인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대한 기존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남북한 상호사찰 요구 등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력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통한 外交的 壓力, 국제 원자력기구의 대북한 핵사찰 강화 등을 통하여 북한의 核開發 沮止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이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간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 확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남·북경협 추진 방침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계획 저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모색의 차원에서 북한의 核問題와 남·북경협 사안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1992. 2. 25, 팔 미대통령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방한 시). 이러한 입장은 양국정부간에 의견조정을 거쳐 대북한 경제 교류협력에 적용되고 있다.

1990년대 양국간의 교역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미 대통령의 訪韓(1992. 1. 5~7)시 미국은 무역관행에서의 相互主義 原則과 시장개방 폭의 확대 및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협조(특히, 농산물분야에서의 보조금 삭감 등)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정상회담 및 경제협의회(1992. 2)와 같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 정책당국자들간의 회합에서는 양국의 경제·통상관계에 있어서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한국의 시장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야별 회합(1992. 2. 11~17, 한·미통신협상; 1992. 3,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개방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양

면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2) 對北韓關係

미국은 對北韓關係에서 核問題가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경우 미·북한간 접촉의 수준을 격상시키고, 정례화할 수 있다는 유화방안을 제시하는(1992. 1. 22, 캔터 미국 무차관과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간의 뉴욕회담 시)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및 기술의 개발과 제 3국으로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人權改善問題 등도 계속 제기해 오고 있다.

미국은 1992년 5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였으나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을 규제완화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북한에로의 선진기술 및 전략물자 유입을 봉쇄하여, 북한의 核 및 미사일개발 계획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2. 日本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가. 東北亞政策

일본은 경제 초강대국에로의 부상, 국내정치의 보수화, 역

내 역학관계의 변화, 미국의 지원 등을 배경으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소련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 종식을 배경으로 일본은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현 미야자와 내각은 첫째, 새로운 미·일관계의 구축, 둘째, 일·소관계의 개선 및 대소경제지원, 셋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정 등을 당면한 외교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미군주둔 감소로 야기된 미국의 역할 축소에 따라 자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그 일환으로 미·일간 역할분담을 위한 世界的 同伴者關係(global partnership)를 강조하고 있다. 미·일양국은 「도쿄 선언」(1992. 1. 9)에서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미·일관계 강화, 아시아 시장개방 촉진, 주일미군 경비부담 확대, 미·일·유럽 3자대화 강화 등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내용은 세계평화를 위해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유엔평화유지(PKO)협력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1992. 6. 15). 이 법안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면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외교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소련의 붕괴에 따라 「防衛力檢討委員會」를 설치하고(1992. 1. 21)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 재검토작업에 착수

하였으나 동아시아에서 탈냉전현상이 유럽에 비해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러시아의 극동해군 및 공군력에 대항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증강을 골자로 하는 5개년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1991~95)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에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지대공 미사일, 구축함, 전차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함께 대일방위분담 및 역할증대를 위한 일본의 방위력증강 요구에 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역분쟁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보를 통해서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나. 對南北韓關係

(1) 對韓國關係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소련 붕괴, 남북한관계 진전, 일·북한수교회담 진행 등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미·일 3국간 입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1992. 1. 16~18). 양국간 정상회담에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자위대 해외파병 등 일본의 역할증대문제, 일·북한 수교문제, 무역불균형문제, 기술이전문제 및 정신대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하여 재차 우려를 나타냈고, 自衛隊의 海外派兵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한반도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 및 일·북한간 국교수립전 핵사찰선행원칙에 합의하였으며, 한국이 요구하는 日·北韓修交會談의 5개 전제조건을 재확인하였다.

무역불균형 및 기술이전문제와 관련, 한·일양국은 韓·日頂上會談(1992. 1. 16~18) 합의사항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1992. 6. 12), 무역불균형 시정방안을 협의하였으나, 환경분야 협력 및 경제인포럼 구성에 합의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對北韓關係

일본은 동북아지역 및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취지하에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교섭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북한 양국은 제 6차(1992. 1. 30~2. 1) 및 제 7차 국교정상화회담(1992. 5. 13~15)을 개최하였으나 핵문제, 보상문제, 관할권문제 등에서 이전을 보여 수교교섭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일본은 앞으로도 대북협상에 있어서 미국 및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핵문제는 日·北韓 修交協商의 진전에 계속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中國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가. 東北亞政策

중국은 냉전이후시대에 「平和」와 「發展」의 문제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실리와 안보를 얻기 위하여 「獨立自主的 平和外交」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평화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환경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과의 平和共存을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의 대동북아 외교정책 목표는 평화공존원칙에 입각, 전환기에 역내의 안정을 유지하고 현대화를 통한 증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아정책은 보다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지도자의 상호 교환방문(1992. 1. 3~6, 와타나베 일본외상; 1992. 4. 4~10, 江澤民 총서기; 1992. 5. 25~6. 1, 萬里 전인대상무위원장 등)을 통하여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 개최(1992. 4. 14~23) 등을 통하여 역내 국가간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의 방중(1992. 3. 16~17)을 계기로 양국간의 국경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경제협력 확대를 합의하였다. 미국과의 긴장은 중국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약속 및 양국간 교역체제와 중국 내 인권문제 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안보문제와 관련 중국은 구소련의 위협 감소와 미국의 군사력 감축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 추세 및 캄보디아문제의 정치적 해결 가능성 증대로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가 여전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서방의 대중국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에 아직도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병력추가감축계획(「解放軍報」, 1992. 1. 3)을 밝히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정식 가입하면서도(1992. 3. 9)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1992년 국방예산은 예산증가율 8.6%를 훨씬 능가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67.6억달러로 책정되었다. 또한 중국은 대규모 핵무기실험을 실시하는 한편(1992. 5. 22), 헬기탑재 신형구축함 2척 건조, 輕航空母艦 5척 건조(1990년대 말 완료 예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항공모함 도입 추진 등을 통하여 해·공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軍事力 現代化作業은 첫째, 분쟁의 관련국인 동남아제국 및 일본 등을 겨냥, 주변 해역의 영토관할

권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둘째,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셋째, 역내에서 미·소의 발언권 약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에 대비, 넷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역내 영향력 확대, 다섯째,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대한 군부의 지지 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실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절충함으로써 역내 질서의 안정 유지와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 對南北韓關係

(1) 對韓國關係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경제 협력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韓·中修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1992. 3. 19), 제 7기 5차 전인대 「政府工作報告」(1992. 3. 20)에서 대북 일변도정책을 지양하고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전개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상욱 외무장관의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1992. 4. 13)을 계기로 경제·정치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동 회의를 계기로 이상욱 외무장관과 이봉총리 및 전기침 외교부장은 한·중간 고위급 회동을 갖고 양

국이 북한의 핵개발문제 및 양국간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국제무대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문제와 관련, 한국과 무역협정을 정식 발효시켰으며(1992. 2. 1),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1992. 5. 2). 민간차원에서는 중국 흑룡강성과 한국 대륙종합개발주식회사간에 삼강평원을 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1992. 2. 15) 한·중간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한·중 무역협정은 종래 중국이 한국상품에 부과했던 차별관세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교역상의 불균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며, 아울러 투자보장협정 체결로 한국기업의 대중국진출이 보다 활성화되어 韓·中經濟協力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중 양국은 처음으로 정식 국호와 국기를 사용, 상품전람회를 상대방 수도에서 개최하였다(한국, 1992. 5. 12~16; 중국, 1992. 5. 26~6. 1). 이러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축적은 정치적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1992년 하반기 한·중관계는 방콕에서 개최될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9월 예정)에서 예상되는 양국 외무장관 회동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 및 정치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對北韓關係

중국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맞아 국가주석 楊尙昆을 평

양에 파견하여(1992. 4. 13~17)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중앙군사위 비서장 楊白水의 방북(1992. 6. 4~11)을 통해 군사협력관계의 지속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강택민 총서기의 방일시(1992. 4. 4~10) 일본에게 북한과의 조속한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대외적 고립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核武器開發問題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안정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남북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양국간 무역방식을 기존의 구상무역방식에서 硬貨決濟方式으로 전환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1992. 1. 26)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은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은 중·북한관계를 과거의 혈맹관계가 아닌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로 표현함으로써(1992. 4. 강택민 방일중 발언) 과거 대북한지지 일변도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4. 러시아聯邦의 東北亞政策 및 對南北韓關係

가. 東北亞政策

러시아연방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의 「신사고」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개혁정책목표는 국내정치·경제체제를 서구모델에

의한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안정화와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및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은 군사·안보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善隣友好關係를 구축하여 지역 군사대당트를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경협 강화와 아·태지역 공동체로의 편입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한반도의 안정을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로 보고 좀 더 현실적인 대한반도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연방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나. 對南北韓關係

(1) 對韓國關係

엘친 러시아연방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간의 현안문제 조정을 위하여 코지레프 외무장관이 방한하여(1992. 3. 17~19) 양국간 외상회담이 개최되었는 바, 한·러간 영사협정과 비자발급에 관한 양해각서가 조인되었으며 양국이 經濟協力再開를 확인하고 국제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안보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남북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1991. 12. 31),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1992. 1. 31)과 핵사찰 수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파노프 신임 주한 러시아연방대사는 북한이 조속히 核査察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밝힌 바 있고(1992. 3. 20), 엘친대통령은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1992. 6. 16~17)에서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 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연방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오호츠크해 어업협정을 체결하고(1992. 2. 8)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1992. 5. 22). 또한 러시아연방 기업가 일행이 방한하여 산업기술 이전문제, 러시아 현지 합작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협력방안 등을 한국측과 논의하였다(1992. 5. 17~23).

한편 러시아연방은 한국이 舊蘇聯에 제공한 차관(현금차관 10억달러, 소비재차관 4억 7천만달러)에 대하여 채무보증 승계를 약속하고(1992. 5. 22), 이를 위한 서면보증을 러시아연방 대표단의 방한시(1992. 7. 9 방한 예정)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에 대한 경협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한·러 협력관계는 양국 외무장관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을 확정, 합의

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1992. 6. 29). 이 조약 전문은 양국관계를 “우방국으로서 영속적인 友好協力關係를 발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엘친대통령은 이상옥 외무장관과의 회담(1992. 6. 30)에서 북한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유대관계가 종료되었으며, 1961년 체결된 북한·소련간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은 형식상 존재할 뿐 그 내용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강조했다. 엘친대통령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군사기술을 포함한 일체의 대북 기술이전이 불허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러시아연방의 한반도정책은 한국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이와 관련 한·러관계는 엘친대통령의 방한(1992. 9 예정)을 계기로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2) 對北韓關係

엘친대통령의 특사 로가초프가 북한을 방문하여(1992. 1. 18~21)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였고, 「독립국가연합」 통합군과 북한군간의 군사관계 발전을 위한 긴급 조치계획문서가 조인되었다(1992. 3. 3). 그 주요 내용은 전투함대와 비행단의 상호방문, 러시아 극동 및 트랜스 바이칼 군구와 북한군간의 우호관계 확대 등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1961년 북한·소련간 체결된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반자관계 확립 및 한국과의 「기본조약」 체결을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연방의 대남북한관계는

북한과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하여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經濟協力關係는 러시아연방 자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러·북한간 교역도 러시아연방의 대북경화결제 요구로 1991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Ⅲ. 東北亞 4強間 兩者關係

1. 美·日關係

1992년 상반기 미·일은 양국관계를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켰다.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도쿄선언」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1992.1.9). 「도쿄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은 양국관계를 세계적 동반자관계로 천명하고, 안보 및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미·일양국은 安保協力關係를 강화하고, 그 구체적 사안으로서 일본의 주일미군 체재경비 부담확대에 합의하였다. 셋째, 미·일양국은 아시아에서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를 기반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도쿄선언」과 함께 합의된 「행동계획」에는 미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확대 등 일본의 구체적인 市場開放計劃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일 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일본은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후로 유보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미·일 양국이 합의한 「도쿄선언」은 일본이 시장개방 확대와 미국상품 구매확대를 통해 미·일간 무역역조 시정노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협조적 자세를 취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측면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이 합의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및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위상 제고에 미국이 협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볼턴 미국무부 차관보는 “적절한 시기에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1992. 3. 25).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1992. 6. 15)와 관련, 미국은 일본이 세계평화를 위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여 왔던 바,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였다. 이는 미국이 국제정치질서 안정을 위하여 일본을 安定維持勢力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지역안보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한편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 미야자와 총리는 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제도화하고 정치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면서 주변국들의 대일본 우려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多者間 安保機構 구성을 제의하였다(1992. 6. 22).

이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문제에서도 다자간 접근을 통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증대시

키려 하고 있다.

2. 美·中關係

중국은 소련방의 붕괴로 미·러연방 대치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아·태지역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991. 1. 7 楊尙昆 주석 싱가포르 방문 중 언급). 중국은 미·일 양국이 「도쿄선언」에서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천명하는 등 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질서 개편 가능성을 우려하여, 새로운 국제질서가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공존 5원칙」에 의거,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시 미대통령과 이붕 중국총리간의 유엔안보리 정상회담(1992. 1. 31)에서 미국이 제기한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하여 중국은 內政干渉이라는 이유로 인권 및 정치개혁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대중국 비판을 일축하였다.

그러나 1992년 전반기 미·중관계는 중국이 인권 및 무역문제 등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서방접근을 통한 개혁·개방을 심화하는데 있어 대미관계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로 인한 양국간의 貿易葛藤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과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협상

을 타결지었고(1992. 1. 16), 이에 대하여 미국은 대중상품 보복관세 위협을 철회하였다(1992. 2. 21). 한편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서면 약속(1992. 2. 21), 「핵 확산금지조약」 서명(1992. 3. 9), 그리고 반체제인사 일부 석방조치에 따라 대중국 最惠國待遇를 연장하였다(1992. 6. 2).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과 관련, 미의회는 그 동안 天安門事態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와 미국의 대중무역적자(1990년 104억달러, 1991년 127억달러) 등을 이유로 미행정부의 최혜국대우 연장 계획에 조건을 부과하는 등 제동을 걸어 왔으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계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 유도 필요성으로 인하여 조건없이 최혜국대우를 1년 연장하였다.

미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 관련국들의 관심사인 북한의 核武器開發과 관련, 중국은 핵사찰수용을 북한에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대하여는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美·러關係

1992년 상반기 미·러관계에서 중요한 현안문제는 전략핵 무기감축협상(START)과 러시아연방 및 독립국가연합 구성국들에 대한 서방의 경제원조문제였다.

러시아연방은 부시 미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안에 호응하여 구소연방 해체 후 최초의 軍縮措置로서 약 6백기에 달하는 지상 및 해상 전략핵미사일에 대한 경제경보령을 해제하였으며(1992. 1. 29), 장거리 핵폭격기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자국 미사일의 미국 겨냥을 철회하였다(1992. 1. 25).

미·러 양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1992. 2. 2)을 통해 양국은 상호 잠재적 적국이 아닌 同伴者關係임을 밝히고, 나아가서 미사일 조기경보센터의 공동설립을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미·러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1992. 6. 16~17)에서 양국의 전략핵무기를 1991년 7월에 타결된 「전략핵무기감축협상」 수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이는 새로운 군축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의하면 2003년까지 미국과 러시아연방은 각각 3,500개와 3,000개 수준으로 전략 핵탄두 보유수를 줄이게 될 전망이다. 미국은 자신의 강점인 해상발사탄도미사일(SLBM)에서 양보를 하였고, 러시아연방은 미국이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해온 다탄두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전폐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 협정에 대한 러연방의 양보는 핵무기체계 통제효율성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방의 經濟支援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러 양국정상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

언」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 의무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것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러 양국간 정치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데 반하여 경제면에서는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연방의 정치·경제개혁이 실패하는 경우 러시아연방이 全體主義로 복귀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의 정치불안과 투자여건 불비 및 미국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정과 기술지원 및 투자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연방의 정치안정과 경제체제 개혁을 위하여 서방이 러시아연방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국내외의 강력한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서방선진7개국(G7) 회담(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1992. 4. 25~26)에서 러시아연방에 대한 240억달러의 차관 제공 합의 도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러시아 연방의 國際通貨基金(IMF) 및 世界銀行(IBRD)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1992. 6. 1 ; 6. 16) 러시아연방이 이들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4. 日·中關係

일·중관계는 상호협력과 견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은 천안문사태(1989. 6)로 빚어진

미국과의 관계경색을 대일관계 강화로 보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일관계 정상화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진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江澤民 總書記 방일시(1992. 4. 4~10) 5년간에 걸친 7천억엔 상당의 對中國借款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은 세계은행의 대중국차관 조기 실현과 중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을 위한 일본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긍정적인 회답을 얻었다. 그러나 강택민 총서기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는 등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일본은 중국의 일왕방중 요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수락하지 않았다.

대북한문제와 관련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일·북한 조기수교를 권유한데 대하여 일본은 북한 핵사찰수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하였다.

중국이 釣魚臺列島를 중국영토로 규정하는 영해법을 통과시킨데(1992. 2. 25) 대하여 일본은 즉시 이에 항의하였으나, 강택민 총서기는 방일시 이 문제를 後代에 해결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釣魚臺問題가 일·중 양국간 분쟁요인으로 발전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중국은 1992년 초부터 일본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하여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은 유엔군사력 비대화를 비판하고 유엔평화유지군 불참

방침을 표명한 바 있으나(1992. 3. 12), 중국은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일본의 주도권 행사를 우려하여 캄보디아에 47명의 군사관찰단과 4백명의 공병대대를 파견하였다.

중국은 일본자위대의 캄보디아파견에 대하여 군사적 목적이 아닌 災害復舊任務에 국한될 경우에만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江澤民 총서기 방일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데(1992. 6. 15) 대하여 일본이 軍事大國化를 지향하는 1단계 조치로 간주하고 일본의 신중한 자세를 재차 요구하였다(1992. 6. 11, 중국의교부성명).

5. 日·러關係

일본과 러시아연방은 과거 유산인 영토문제 및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직도 동북아시아 및 일본의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하고 있고, 領土問題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경제발전 및 동북아정세 안정을 위하여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잠재적 동맹국관계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1992년 전반기 일·러 양국관계는 일·소 공동선언(1956)의 합법성을 인정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러시아연방이 인정함으

로써(1991년 12월말)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일·소공동선언의 내용은 양국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북방영토 2개 섬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엘친 대통령과 미야자와 총리간의 뉴욕 정상회담(1992. 1. 31) 이후 양국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일·러 양국은 平和條約 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제 1차 실무자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고(1992. 2. 10~11), 나카소네 전 일본수상의 러시아방문시(1992. 3. 1~5) 1990년대 말까지 평화조약을 체결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은 일본을 방문하여(1992. 3. 19~22) 북방영토를 비롯한 양국 현안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와타나베 일본외상의 러시아연방 방문(1992. 5. 2~5)을 통하여 양국관계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러 양국은 북방영토문제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단계 공식」(평화조약 체결과 연계한 2단계 반환)을 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은 「5단계 해결방안」(러시아연방에 의한 영토문제 인정, 북방영토의 비군사화,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인 전환, 평화조약 체결,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와타나베 일본외상의 러시아연방 방문시 재확인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우려해 온 일본은 러시아연방 극동군의 해·공군 현대화 등 질적 개선에 대처

하여 첨단군사장비를 홋카이도(北海道)에 투입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1992. 1. 22). 이와 같이 일본은 영토문제에 대하여 러시아연방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막강한 극동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러시아연방을 潛在的 假想敵으로 인식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러 경제관계와 관련 일본재계는 러시아연방의 경제실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일본의 「소련동구무역협회 보고서」(1992. 4)는 일본의 독립국가연합 및 러시아연방에 대한 경제지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연방 장래의 불투명으로 인해 러시아연방의 경제원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원조 이외에는 양국간 經濟協力을 자제하고 있으나, 서방선진7개국 회담과 국제통화기금 등 다자간기구를 통한 대러 경제지원에는 참여하고 있다.

北方領土問題가 일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일·러관계의 확대·심화는 어려울 것이며, 일본의 대러 경제지원 및 서방측의 대러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6. 中·러關係

중국은 소련의 개혁정책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이를 비판해 왔으나,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연방 등 獨立國家 聯合의 창설을 현실로 인정하고 독립국가연합 공화국들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군사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이붕·엘친간 유엔정상회담(1992. 1. 31)에서 기존의 양국간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반패권주의와 중국의 평화공존 5원칙에 의거한 友好關係 擴大에 합의하였다.

중·러 양국은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의 방중시 양국간 5,000Km에 이르는 동부국경선을 확정하는 합의서를 교환하였다(1992. 3. 16). 또한 중·러 양국간 군사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은 군사현대화 추진의 일환으로 탱크 400대, Su-27 24기 등 러시아무기의 구입을 확정하였으며(1992. 5. 3), 우크라이나공화국으로부터 항공모함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중국 북부 접경지역 군병력의 相互減縮을 단행함으로써(1992. 5. 25) 신뢰구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어 상호간 經濟協力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黑龍江省과 러시아연방 아무르자치주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1992. 2), 담배, 석유, 시멘트 등의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합의하는 등 지방정부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양국은 무역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1992. 3. 16)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IV. 東 北 亞 情 勢

1. 東 北 亞 安 保 環 境

1992년 상반기 동북아에서는 미·러 동반자관계 확립, 북한 핵사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증대,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미·일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 역내 국가간 무역마찰 해소 노력 증대 등의 추세로 인하여 냉전을 종결짓는 和解와 緊張緩和 노력이 진행되었다.

미·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폭적인 핵감축에 합의함으로써 재래식 전력의 감축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世界防禦體制」(global protection system)에 러시아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안보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미·러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긴장완화 추세를 증진시킬 것이고, 한반도의 통일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미·러는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력 및 미사일기술 확산 억제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도 국제적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외교적 설득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심화하고 있는 바, 미·일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역안정 유지를 위한 平和共存 外交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도쿄선언」을 통해서 미·일안보역할의 세계화를 천명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역할 수행과정에서 일본의 인적·물적 지원을 확보하며, 일본은 미국의 지원 아래 정치·군사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통과시키고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을 적극 추진하는 등 地域紛爭 解決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처하고 동북아 지역 세력균형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軍事力 現代化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정세의 변화는 냉전이후시대의 동북아질서를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된 미국, 대변혁으로 쇠퇴한 러시아연방,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중국, 그리고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시도하는 일본의 4강구조로 정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비하여, 일부 역내 국가들은 군비증강을 통해 전략적 우위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不安要因이 되고 있다.

역내 경제문제와 관련, 1992년 전반기 동북아지역에서는

역내 국가간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일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미·일 무역역조 시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구조적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일본의 對韓 技術移轉問題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역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과 관련 중국은 1991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과 무역확대를 이룩하였다. 반면 북한은 두만강지역 개발에 적극성을 표명하는 등 경제개방 구상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 미해결, 투자위험도, 북한의 내부개혁 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주변국가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에 따른 일부 역내 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세를 우려하여 지역국들은 소지역차원에서 多者的 安保協議體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양자적 동맹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안보이익과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여 다자간 접근을 반대하여 왔으나 최근 냉전이 후시대의 국제 조류, 경제난 등으로 「集團介入政策」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역내에서 자국의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주변국

들의 대일 우려를 완화할 목적으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소련의 「신사고」 외교노선을 답습하여 다자간 접근노력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과거 다자간안보포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 러시아연방의 불안정,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한 남북한 군비경쟁 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지역불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포럼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의 정치·군사역할 증대를 우려하여 多者主義的 接近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 미·일·러 등은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조치 등 다자적 접근 노력도 구상하고 있다. 물론 다자주의적 접근은 내재적 비효율성, 과도한 유지비용 및 현안문제 해결의 지연 등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문제 및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안보·신뢰구축을 위한 小地域 次元에서의 다자주의적 접근 노력이 가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태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과 관련,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특혜관세제도 채택과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합의하는 등 經濟協力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동북아에서는 쌍무적인 관계에 바탕을 둔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다자간 경제협력문제는 소지역(황해권, 발해권, 화남권, 동해권)을 중심으로 한 논의만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개방적 地域經濟協議體의 구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2.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1992년 전반기 동북아정세 변화는 韓半島 統一環境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미·러간 대폭적 핵감축 합의와 세계안보 유지를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은 한반도의 軍縮 및 남북한간 정치·군사분야에서의 緊張緩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미·러가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國際的 壓力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심화는 북한에 대하여 경제개혁 압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한·중 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한 한·중간 政治關係 改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국제경제에 있어서 상호의존성 증대는 동북아시아에도 파급되어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北韓의 開放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한·러, 한·중관계의 심화는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서 러·중 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북한의 核開發問題는 동북아시아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역국가간 국제적 협력 노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나,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완강한 자세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 및 화해협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와 중국의 군사력현대화 추진은 지역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 軍縮協商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役割強化(예: 유고, 캄보디아 등) 및 다자간 신뢰구축 제안 대두는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를 「國際化」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한국과 북한은 「기본합의서」의 실천과 관련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통일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핵개발문제가 남북한 관계개선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국가간 和解와 協力の 심화추세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개혁·개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빈 면

<附錄 1>

1992年 上半期 主要事件 日誌

1. 1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
 - 핵무기 시험 제조·접수·사용금지, 평화목적 이외의 핵에너지 이용 및 핵재처리 농축시설 보유 금지, 쌍방향의하는 대상에 사찰실시 및 한달안에 핵통제 공동위 구성
1. 3 김일성 1991년도 신년사 발표
 - 남북합의서 성실이행 촉구 및 핵사찰 국제압력 비난
 - 와타나베 일본외무장관 訪中(~6)
 - 중국, 병력추가감축계획 발표
1. 4 북경에서 일·중 외무장관회담시 중국, 日王 초청
1. 5 미국, 새「亞·太 安保網」추진의사 표명
1. 6 서울에서 한·미정상 단독·확대회담 개최
 - 노태우 대통령 농산물시장 개방유보 요청
 - 부시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
 - 북한핵 공동대응책 협의서울에서 한·미 통상합동회의 개최
1. 7 부시 미대통령, 일본 방문
 - 한국, 북한 핵사찰수락 땀 「팀스피리트」 훈련 취소용의 표명
1. 8 중국정부, 한반도비핵화 노력 환영 표명
1. 9 부시 미국대통령·미야자와 일본수상, 「도쿄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 북한,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요구
1. 10 미·일, 북한핵에 공동대처(미·일정상 「도쿄선언」)
1. 13 李鵬 중국총리, 북·일수교 적극 지원 및 미·북관계 정상화
필요 역설
楊尙崑 중국주석, 「아·태경제회의」 창설 지지 표명
한국, 일본에 역조 개선 「행동계획」(과기재단 설치, 관세
율 인하 등) 제의
1. 16 미야자와 일본수상 한국방문, 국회연설통해 중군위안부문
제 사죄(~18)
미·중, 지적소유권 보호협상 타결
1. 17 한·일, 서울에서 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를 위한
「실천계획」 작성에 합의
楊尙崑 중국주석, 싱가포르방문중 미국이 아·태지역의 주도
적 세력으로 등장 인정
1. 18 일본, 북한과 수교전 핵문제 해결의사 표명
로가초프 옐친대통령 특사, 북한 방문(~21)
1. 21 일본, 「방위력검토위원회」 설치
1. 22 뉴욕에서 아놀드 센터 미국무차관,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
제부장과 회동
일본, 러시아연방 극동군의 질적 개선에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군사장비 홋카이도에 투입계획 발표
1. 25 러시아연방, 전술핵 2만개 전량 폐기 선언
와타나베 일본외무장관, 러시아연방 방문시 옐친 訪日 초
청
1. 26 미국, 북한서 핵사찰 응하면 주한기지공개 용의 표명

- 미국, 공장 부분폐쇄 및 미사일 감산 등 핵탄제조 무기한
중지 선언
- 미국, 동아시아지역 미군 2차 철수시 주한미군 제외 예정
평양에서 중국·북한간 경화결제 「무역협정」 조인
1. 29 부시, 전략핵(대륙간 탄도미사일, 스텔스機 등 포함) 생산
중단 선언
- 미 국무부,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
리아 등 6개국을 테러지원국가로 분류(1991. 4. 지정 후
재지정)
- 러연방, 전략핵미사일에 대한 경계경보령 해제
1. 30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 정식 조인
북경에서 일·북한 제 6차 수교회담 개최(~2. 1)
1. 31 북한, 핵안전협정 서명
- 한·중, 三江平原 개발계약 체결
- 뉴욕에서 부시 미대통령·李鵬 중국총리, 천안문사태 후 미
·중 첫 고위급회담, 중국내 인권문제 둘러싸고 대립
- 뉴욕에서 부시 미대통령·옐친 러시아대통령, 蘇붕괴 후 처
음으로 정상회담 개최, 군축 경제원조 등 논의
2. 1 한·중 무역협정 발효, 차별관세 철폐
2. 2 미·러, 「캠프 데이비드 선언」 합의
2. 4 딕 체니 미국방장관,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 미상원예산위
공청회에서 북한을 아시아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
미군의 장기적인 아시아주둔 방침 천명
2. 5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 상원외교청문회에서 미국의 대
외정책 기조 「봉쇄정책」에서 「집단개입정책」으로의 전

환 선언

- 2. 6 아놀드 캔터 미국무차관 미상원 외무위 아시아·태평양소
위 증언,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에서 미정부의 대북한 관
계개선방침 전달 및 남·북한간의 동시시범사찰 촉구
- 2. 7 아놀드 캔터 미국무차관 의회증언, 북한 핵개발 포기מן 관
계개선 용의 표명
- 2. 8 한·러, 오호츠크해 어업협정 체결
- 2. 10 국제원자력기구, 미신고 핵시설에 강제사찰 시행 및 건설
계획 보고 의무화
錢其琛 중국외교부장, 1979년이후 처음 캄보디아 방문
일·러, 평화조약 체결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11)
- 2. 11 워싱턴, D.C.에서 제10차 한·미 통신회담 개최(~17)
- 2. 15 한·중, 三江平原 합작개발 공식서명
- 2. 17 노태우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서
명
한·미통신협상 타결
- 2. 18 평양에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21)
김일성주석,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 서명
- 2. 19 북경에서 제3차 한·중경제협정 개최
-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위한 실무협
의(~21)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및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 발효
- 2. 20 중국, 黑龍江省 일대 3곳에 국경자유무역지구 설립계획 표
명

- 동지구에 외국인 투자허용 및 완공에 3~5년 소요
- 연형묵 북한총리,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 전체회의 연설에
서 중군위안부문제와 일본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공동대
응을 한국측에 제안
- 2. 21 미국, 對중상품 보복관세 위협 철폐
북경에서 제 9 차 미·북한접촉
중국,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서면 약속
- 2. 23 더글라스 팔 미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방한(~25),
북한핵문제 해결없는 한 한국의 대북경제협력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 전달
- 2. 24 워싱턴, D.C.에서 제 10 차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
비인에서 국제원자력기구 1992년 1차 이사회 개최(~28)
- 북한의 핵안전협정 비준 및 발효지연 강력 비난 및
협정발효 이전에 핵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보고서
제출, 조기사찰 수용 촉구
- 2. 25 로버트 게이츠 미CIA국장 미하원 외무위 증언
- 북한의 핵무기제조 빠르면 「수개월 이내」(with a
few months to a few years) 가능 시사
중국, 영해법 통과
- 2. 26 서울에서 두만강개발계획(UNDP) 두만강하구개발 실무회
의 개최(~28)
- 2. 29 엘친 러시아연방대통령, 일본 총리에 친서
- 3. 1 북한 핵사찰관련 한·미정책협의회 개최
나카소네 前일본 총리, 러시아방문(~5)
- 3. 2 독립국가연합국軍 6만명과 탱크부대, 중국국경서 연내 철

수 선언(TASS)

3. 3 독립국연합·북한간 긴급조치계획문서 조인
3. 4 제임스 릴리 미국방부차관보, 주한미군 「전진배치전략」유지 재확인
로버트 리스카시 주한 미8군사령관 미상원 군사위 증언
 - 1994년까지 북한은 운반수단까지를 갖춘 완전한 핵무기체제 개발가능
 - 핵무기관련 장비와 물질들을 은밀한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우려 표명콜린 퍼윌 미합참의장, 딕 체니 미국방장관 미하원 외교위 증언
 - 북한의 재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북한 축출계획 시사제임스 릴리 미국방부차관보 방한(~6)
 - 북한의 핵문제 해결 없는 한 주한미군 2차 철군계획 추진 보류의사 표명
3. 6 러시아, 핵유출 첫 시인
3. 7 아르메니아공화국, 독자군창설 선언
3. 8 미 국방부, 「방위계획 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 초안 작성
 -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유지, 유엔을 통한 집단방위 거부 등이 냉전후 미 국방정책의 목표임 밝혀(*New York Times*)
3. 9 중국,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서 제출
3. 10 워싱턴, D.C.에서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3. 11 알렌 홈즈 미국무부 방위비담당대사 방한(~13)

- 주한미군의 연간유지 운영비중 원화로 지불되는 비용의 1/3 수준을 1995년까지 한국측이 연차적으로 증액 하는데 원칙적 합의
 - 1992년도 한국측 부담분 1억 8천만달러(1991년 대비 20% 증액)
 - 1995년에는 원화지불 총액 8억 4천만달러(1991년 기준)의 3분의 1(2억 8천만달러)을 한국측 부담 합의
3. 12 스티븐 솔라즈 미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위원장,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유엔안보리 통한 대북경제제재 조치 및 대 북무력사용문제 검토 주장
錢其琛 중국외교부장, 유엔평화유지군 불참 방침 표명
3. 14 리차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방한(~17)
3. 16 북경에서 중·러 국경협정 서명
중·러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중국, 17일 政協 및 20일 全人大會에서 대남북한 등거리 외교 시사(「文滙報」)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 방중(~17)
3. 17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 방한(~19)
일본 오키나와주둔 미해병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대규모 동계사격훈련 실시
북경에서 제 20 차 미·북한 접촉
 - 북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정식 요구
3. 18 서울에서 제 1 차 한·러시아외무장관회담 개최
 - 코지레프 러시아연방외무장관, 북한 핵문제해결에 전폭 지원 천명

3. 19 중국, 방위비 12% 증액
중국 외교부대변인, 한·중수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코지레프 러시아연방외무장관 방일(~22)
3. 20 李鵬 중국총리, 제 7기 5차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환영 표명
클린 파월 미합참의장 미상원 군사위 증언
- 1993년도에 한반도 분쟁가능성이 높은 바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 검토중
파노프 신임 주한 러시아연방대사, 북한 핵사찰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 표명
3. 22 훈센 캄보디아총리, 일본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요청
3. 24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24개국 외무장관들, 「영공개
방협정」에 서명
3. 25 볼턴 미국무부차관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지 표명
3. 28 중국, 新疆·위구르 자치구에 경제특구인 「경제·기술·무역
특구」 설치 방침(「共同通信」; 「光明日報」)
3. 29 러시아 외무부, 한반도중시 「아·태총국」 신설
3. 30 吳學謙 중국부수상,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견에 반대표명
4. 4 江澤民 중국총서기, 일본 방문(~10)
4. 6 江澤民 중국총서기, 日王 訪中 재요청
4. 8 李相玉 외무장관,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총회 참
석위해 중국방문(~17)
江澤民 중국총서기, 일본 군사대국화 우려 표명
4. 11 북경에서 한·중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4. 13 북경에서 李相玉 외무장관, 錢其琛 중국외교부장 및 李鵬 총리와 회동, 수교문제 집중 논의
한·중, 상반기중 외환은행 북경사무소 개설, 중국은행 서울에 사무소 개설 예정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 평양방문(~17)
4. 14 미국, 밀 15만t 북한에 수출
북경에서 아·태경제사회이사회 개최(~23)
4. 25 서방선진 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26)
러시아, 駐쿠바 군사고문단 철수 및 군사훈련단 철수합의
4. 28 미·일, 레이저방어 무기체제 공동개발 합의
미국 카네기재단 연구원 일행(셀릭 헤리슨, 아놀드 스펙터 등 4인), 북한 방문
5. 1 중국, 한국국기 게양 한국선박 입항 허용
5. 2 북경에서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
와타나베 일본외상, 러시아연방 방문(~5)
5. 3 중국, 舊蘇聯 무기 대량 구입방침 결정(「共同通信」)
5. 4 체니 미국방장관, 「1994~99 회계연도 국방계획 지침」 발표
중국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 50만 감축 결정 발표
북한, 「핵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에 첫 제출
5. 5 제 7 차 남북 고위급회담(~8)
5. 7 남북한, 남북연락사무소 18일 설치 합의
북한, 플루토늄 생산 첫 시인
5. 12 남북한 제 4 차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
미국, 핵탄생산 중단 상태(*Washington Post*)

- 한국, 북경에서 대한민국 상품전람회 개최(~16)
 - 중국, 한국에 정식국호와 국기사용 허가
5. 13 북한, 미군유해 15구 인도
 제 7 차 일·북한수교회담(~15)
 아놀드 캔터 미국무차관 방한(~15)
5. 14 일본, 제 7 차 일·북한 수교회담에서 상호사찰 촉구
5. 15 일본, 해외파견부대 편성 완료
 독립국가연합 6국, 군사동맹 합의
5. 16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북한 핵재처리시설
 보유 확인
5. 17 러연방 기업가 방한, 합작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협력방안
 등 논의(~23)
5. 19 미국,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남북 상호 핵사찰을 동시
 에 실시할 경우 북한과 정기고위회담 용의 표명
 제 4 차 한·중어업회담 개최(~23)
 - 수교이전 어업협정체결에 원칙적 합의
5. 20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북경 방문
5. 21 미·독립국가연합 4국, 주내 핵감축 서명
5. 22 모스크바에서 러, 한국에 「舊蘇借款」 채무 보증 합의
 한·러,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설치 합의
 중국, 대규모 핵무기실험
5. 23 미국과 러시아연방등 4개핵보유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카
 자흐, 벨로루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이행위한
 의정서에 서명
 미 국방부, 「국방계획 지침」 최종안 발표, 「유일강대국」

전략방안 수정

5. 25 국제원자력기구, 북한 핵사찰 시작
丁關根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평양 방문(~6. 1)
萬里 중국 전인대상무위원장, 방일(~6. 1)
중·러 중국북부 접경지역 군병력 상호감축 단행
5. 26 찰스 카트만 미국무부 한국과장 방한(~31)
서울에서 중국상품전람회 개최(중국국기, 국호사용)(~6. 1)
5. 28 서울~산둥성간 국제통신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1993년 2월부터 실시 예정
5. 31 미·독, 독립국가연합 코뮌가입 추진 합의(*Washington Post*)
6. 1 러연방,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북경에서 제 21 차 미·북한 접촉
6. 2 미국, 對중 최혜국대우 연장
미국, 핵 상호사찰 거부때 미·북한 관계개선 불가 표명
6. 4 일·중, 해남에서 소형자동차 합작사 설립
- 7월부터 생산 개시
楊白冰 중국 중앙군사위 비서장, 평양 방문(~11)
6. 8 워싱턴, D.C.에서 미·러, 전략핵무기추가감축협상에서 핵
탄두 50%감축 합의
6. 9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실
무 분과위원회(PRS) 개최
- 주한 미군 2단계 감축계획 연기 합의
일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참의원 통과

6. 10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북한 영변에서 대형 재처리시설 건설 확인
미 국무부, 일본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 환영
6. 11 한국정부, 제 6 차 남북핵통제위에서 북한 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지 않을 시 이를 비핵화선언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
중국, 대규모 지하핵실험(*Washington Times*)
중국 외교부,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중의원 통과에 대해 이를 군사대국화의 1단계 조치로 간주, 일본의 신중한 자세 재차요구
6. 12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무역불균형 시정방안 협의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 개최(~14)
6. 14 강택민 중국총서기, 「개혁가속화」 천명
서울에서 제 5 차 한·미 재계회의 개최(~16)
6. 15 일본,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확정
비인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개최(~19)
6. 16 워싱턴, D.C.에서 미·러 정상회담(~17)
- 투자협정 체결, 미·러 전략핵 70% 감축 및 북한에 상호사찰 촉구
미국 상무부, 미사일관련 기술수출시 미정부에 사전면허 대상국에 북한 포함키로 결정
러연방, 세계은행(IBRD) 가입
러시아, 국경수비대 창설확정
6. 17 국제원자력기구, 북핵 안전성에 의문제기

- 6. 22 미야자와 일총리, 다자간 안보기구 구성 제의
- 6. 23 중·러시아, 「핵융합」 공동연구 추진(*China Daily*)
- 6. 29 한·러 외무장관회담, 양국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확정
 미국, 「세계방위그룹」 추진
 월포비츠 미국방차관, 아시아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의 주
 도적 역할 지속 표명
- 6. 30 모스크바에서 이상옥 외무장관, 옐친 러시아연방대통령과
 회담

〈附錄 2〉

1992年 下半年 主要事件 豫想日誌

- 7. 3 한·카자흐스탄공화국간 외무장관회담
- 7. 5 모스크바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 총재,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재정지원문제와 관련 러시아 정부관계자들과 회담
- 7. 6 뮌헨에서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8)
- 7. 9 러시아연방 대표단, 對韓 채무서면보증 위해 방한 예정
- 7.10 한국외환은행 북경사무소 업무개시 예정
- 7.13 뉴욕에서 美민주당 전당대회 예정(~16)
- 7월중 스페인 세비아에서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예정
일본 참의원선거 예정
- 8.17 휴스턴에서 美공화당 전당대회 예정(~20)
- 8월중 모스크바에서 일·소경제합동위원회 예정
중국, 13차 9중전회 예정
美공화당 전당대회 예정
쿠나제 러시아외무차관 방한, 한·러시아 기본관계조약 가 서명 예정
러·일 경제합동위원회 개최 예정
- 가 을 러시아연방 제 7 차 인민대표대회 개최 예정
- 9월중 비동맹제국 정상회담 예정
방콕에서 제 4 차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시 한·중외무장관 회동 예정

뉴욕에서 제 47 회 유엔총회 예정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 한·일·중 방문, 한·러시아 기본
관계조약 체결 예정

9. 29 일·중 국교정상화20주년

9월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총회 개최 예정

10월초 아키히토(明仁) 일본국왕 訪中 예정

10. 24 군축주간(~30)

10월말 중국, 14차 당대회 예정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 訪中 예정

11. 3 美대통령선거 예정

12. 31 유럽공동체 시장통합 완성 예정